

# 일본장편소설 대망과 일본경제 30년

김현철교수(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)

## I. 버블경제의 발생과 붕괴

### 1. 버블의 발생

- 1985년 플라자합의 1달러당 237엔이 155엔으로 절상
- 정책금리 인하와 내수 부양
- 추가급등, 지가급등
- 버블경제의 시작

### 2. 버블의 붕괴

- 1989년 정책금리 인상과 대출규제
- 추가하락, 부동산가격하락

## II.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경제

### 1. 디플레이션의 발생

-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의 소비세인상(3%에서 5%로, 국가부채비율 70%)
- 복합불황(전후 최악의 금융위기, 불량기업 파산 급증)
- 가격 파괴와 디플레이션
- 1998년 마이너스 성장
- 명목 및 실질임금 본격 하락
- 실업률 5%로, 1차 청년 취업 빙하기 (기존사원 정리해고 불가에 따른 신입사원 고용 꺼림, 비정규직 고용 증가, 본격적인 임금하락 시작)
- 기업들 비정규직 확대, 연봉제 도입 본격화
- 1999년 경제활동인구 감소, 일본은행 제로 금리 정책 시작

### 2. 고이즈미 개혁

- 2001년 고이즈미 정권 탄생
-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 없다: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(우정 민영화)
- 총수요부족과 vs 공급측면 구조개혁과의 대립(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썼지만

효과 없었다. 일본 경제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)

- 금융기관 부실채권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
- 2002.1~2008.2 이자나기 호경기, 아무도 모르는 호경기

### III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권교체

#### 1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

- 2009년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, 실업률 5.5%, 2차 청년 취업 빙하기
- 한국의 원약세와는 달리 일본은 엔강세(세계적 안전자산국,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무용론)
- 엔고와 디플레이션의 상호 상승효과(수출악화, 수입촉진, 물가하락과 엔고환원세일)

#### 2.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 탄생

##### 1)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

- 선심성 경기 대책이나 신자유주의적인 고미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 반대
- 공공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 반대(토건국가로 독자적인 지역 산업과 생활 기반 붕괴, 재정 적자만)
-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자유화에 반대(중소기업 폐업과 빈곤층 문제, 잠재성장력 저하)
- 인간을 위한 경제로 전환: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, 산업 인프라 정비에서 환경, 의료, 복지 등사회 인프라 정비로
- 공급에서 수요정책으로: 산업과 기업에 예산을 배분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 재분배 정책
-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의 전환: 경제성장률 3%-2%-1%
- 국민생활 향상: 국민 행복도, 만족도라는 지표 도입
- 엔고 용인이 가장 큰 패착

##### 2) 하토야마 내각

- 2009.9하토야마 내각: 신성장 전략-빛나는 일본을 목표로  
: 환경, 건강, 관광 등에서 새로운 수요창조와 고용창출
-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 에너지 대국: 저탄소 사회의 실현, 재생 에너지 보급 등

-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 대국: 의료 간병 건강 관련 산업 육성
- 관광 입국 지역 활성화 전략: 관광입국과 지방도시 재생
- 고용 인재 전략: 최저임금인상, 여성 고령자 장애인 취업률 향상, 출생률 향상
- 아시아 경제 전략: 아시아 산업 통합에 적극 참여하여 내수권화

### 3) 간 내각

- 2010.6 간 내각: 강한 경제, 강한 재정, 강한 사회보장
- 간 내각: 신성장 전략-활기 넘치는 일본 부활의 시나리오
- 금융개혁, 종합특구제도 추가

### 4) 노다 내각

- 2011.8 노다 내각: 일본재생 전략-프론티어를 개척하는 창생의 나라
- TPP가입이 추가
- 소비세 증세 추진

## 3. 민주당 정권의 몰락

- 보수지와 경제지들의 반발: 6중고론(엔고, 높은 법인세율, 노동규제, 환경규제, 전력부족, FTA지연)
- 관료들의 반발: 관에서 민으로, 정치주도를 관료배제로 인식, 특히 재무성(재정건전), 외무성(친미, TPP), 경제산업성(원전수출, 경제특구)이 반발
- 2011.3 동북 대지진 발생과 정치 리더십의 큰 타격.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여론형성

## IV. 정권교체와 아베노믹스

### 1. 아베 내각의 탄생

- 아베 내각: 일본 부흥 전략, Japan in back
- 축소균형의 분배정책으로부터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로의 전환: “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거시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.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어 실업률이 악화되면 분배도 더욱 악화된다”라는 문제의식
-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엔 탈환 프로젝트
- 일본경제 재생본부 설치
- 3%경제성장률, 2%물가상승률을 목표

## 2. 긴급 단기 경제 대책: 3가지 화살

### 1) 단기 긴급 대책: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 위한 3가지 화살

#### (1)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: 통화량을 2년에 2배로 늘리는,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금융완화 정책

- A. Fisher(1933)의 Reflation론: 디플레이션 때문에 지나치게 내려간 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이 안 될 정도까지 계속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

- 일본경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관적 시각 때문에 자기 실현적 기대가 발생, 그 결과 항구적 수요부족과 높은 실업률이 발생

#### (2) 적극적 재정정책: 재정을 통한 공공사업 확대

#### (3) 적극적 산업정책이 아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

##### (가) 투자의 촉진

- 법인세 인하

- 공공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

##### (나) 세계경제와의 결합(글로벌화) 강화

- 외국인 관광객 유치

- 외국과의 거래 촉진(TPP 등)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수주

##### (다) 인재 활약 강화

-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장소 제공

-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 고용

- 노동자의 수월한 이직 지원

##### (라) 새로운 시장 창출

-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함

-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

- 쌀 생산량 조절 정책 폐지

### 결과:

- 추가상승과 기업수익 개선

- 고용지표 개선

- 엔저 효과: 수출증대, 관광산업 활성화

- 2013년부터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출

- 3번째 화살에 대한 비판

2) 중장기 구조개혁: 새로운 3가지 화살

(1) 뿌리깊은 경제비관론이 여전히 존재: 저출산고령화, 인구감소, 재정적자 누적

- 체감 경기 불변: 실질 임금 하락, 기업 투자 부진

- 특히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이 패착

(2) 중장기 구조개혁 대책 수립

- 2015년 9월 25일에 2015년부터 3년을 아베노믹스의 제2스테이지로 지정

- 일억 총 활약 사회 비전 제시: "여성도 남성도 노인들도 젊은이도 한번 실패를 - 경험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난치병이 있는 사람도 가정에서, 직장에서, 지역에서 모든 자리에 서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전원 참가형 사회"를 목표

(가)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 메커니즘의 제시

(나) 일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횡단적 과제인 근로방식개혁의 방향

(다) "희망출산율 1.8"을 위한 대응 방향 (새로운 화살1: 꿈을 만들어 내는 육아지원)

(라) "간호이직0"를 위한 대응 방향(새로운 화살2: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)

(마) "전후 최대의 명목 GDP 600조엔"을 위한 대응 방향(새로운 화살3: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)

(3)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작업

(가) 2015년 일본재흥전략 개정: 미래에의 투자와 생산성 혁명

산업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통치 개혁, 차세대 교통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 혁신, 의료관광 활성화 등

(나) 2016년 일본재흥전략: 제4차산업혁명을 향하여

IOT제도 설계, 드론, 인공지능 중심의 민관전략 프로젝트 실시

(다) 2017년 미래투자전략: 사회5.0의 실현을 위한 개혁

혁신적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사회과제를 해결

건강수명과 IT의 융합, 이동혁명, 핀테크

결과

- 경제비관론을 불식

잃어버린 20년의 자학, 총수요 감소(국내투자와 국내소비 감소), 총수요 감소는 고용

감소 및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짐, 그 결과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졌음

- 공급 사이드의 구조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

기술혁신, 생산성 향상, 인적자본 확충, 청년 여성 고령층의 역량강화 등의 정책을 매년 새롭게 추가하여 발표

과거식 산업정책이란 비판도 있지만 강한 경제를 향한 희망을 제공

### 3) 남겨진 과제들

(1) 기업 투자 증가: 2012년 이후 기업의 경상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기업들은 현금 유보액만 쌓고 설비투자에는 소극적

- 지속적인 산업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

- 2016년부터 다시 설비투자 재반등

(2) 가계 소비 증가: 2014년 소비세 인상후 떨어졌던 가계 소비도 점차적으로 회복

-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만 남음

- 2013년부터 명목임금이 조금씩 상승, 특히 비정규직 중심으로

- 2015년부터 실질임금이 조금씩 상승, 완전고용에 가까워진 징조로 판단

- 2016년 이후 정규직 고용비율 증가

- 2018년 기본급인상 3%를 정부가 경영자단체에 요구

(3)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하강

- 올해 또다시 소비세 추가 증세를 예정

- 2%의 인플레이션 목표로부터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